2021. 12. 20 517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역대 최대 규모 '2022년 예산안' 발표

사회·복지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는 'Farm to Feed Kenya'

환경·안전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법 '장강보호법' 시행

도시교통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도시계획·주택 노점상 허가제를 통한 거리환경 정비 추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뉴욕	윤규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디에이고	김민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워싱턴 D.C.	이정근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이은주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이선인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상하이	문혜정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허윤회
바르셀로나	박정수
	진광선
런던	이용훈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역대 최대 규모 '2022년 예산안' 발표

말레이시아 / 행재정·교육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 내각이 집권 이후 처음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2022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것이 주요 골자

배경 및 목적

○ '2022 예산안' 통과

- 2021년 11월 18일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하원에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
- 이번 예산안은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 내각이 2021년 9월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
- 2022년 예산안은 총 3,321억 링깃 규모로, 작년 3,225억 링깃보다 늘어난 말레이시아 역대 최대 규모
  - 이 중 2,335억 링깃은 운영비, 756억 링깃은 개발비, 230억 링깃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
- 이번 예산안은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풍요로운 말레이시아 한 가족'을 목표로 작성

'202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비상상황 대비 정책 예산 20억 링깃 할당

- 2022년 재정적자 GDP의 6.0% 목표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추가 접종) 관련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검토
- 소액 금융 융자금 18억 링깃 할당

○ 중소기업 지원금 142억 링깃 할당

- 경제회복 특별기금 20억 링깃으로 증액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상장기업에 추가 지원금 할당
- 국영기업 카자나 내셔널(Khazanah Nasional)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 최소 30억 링깃 지원

○ 정부 보증 제도(Syarikat Jaminan Pembiayaan Perniagaan Berhad, SJPP)[1] 추가 지원금 최대 100억 링깃 할당

- 건물 개조 및 보수 공사에 대한 세금 공제 시행
- 근로자 숙소 세이프앳워크(Safe@Work)에 대한 세금 면제를 최대 5만 링깃까지 1년간 제공
-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단기 출장 방문객을 위한 '출장 여행객 센터'에 1천만 링깃 할당

○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훈련지원금 8천만 링깃 할당

-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위해 주정부 기술개발센터에 5천만 링깃 할당

○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자 부미푸트라[2] 중소기업에 1억 링깃 할당

○ 할랄(Halal)[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500만 링깃을 할랄 개발협력에 할당

○ 스타트업의 투자 및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and investment)을 위해 최소 300억 링깃 할당

○ 사회적 및 환경 친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대 100억 링깃에 달하는 이슬람 채권 발행

○ 판 보르네오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억 링깃 할당

○ 인지세[4]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 개정

○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번영세(prosperous tax) 도입 검토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세 면제

- 단, 식음료 배달 및 물류 플랫폼은 제외

○ 2022년부터 납세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 도입

- 납세 번호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 납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

○ 2022년부터 정부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 지출 보고서(Tax Expenditure Statement) 발행

- 정부 재무데이터를 이용해 재정보고서를 제공하면 예산집행 등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

1)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용이성을 위해 사업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
2)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집단을 의미
3) 이슬람법에서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
4) 주식 취득, 계약 등 포괄적인 분야에 부과되는 인지세

https://www.mof.gov.my/portal/en/news/press-citations/budget-2022-highlights-summary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10/02/budget-2022-to-focus-on-rakyat-still-affected-by-covid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는 'Farm to Feed Kenya'

케냐 나이로비市 / 사회·복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케냐는 빈번한 통행금지령, 야간 이동제한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졌고 빈곤/양극화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이러한 상황에서 케냐의 비영리기구 'Farm to Feed Kenya'는 낭비되는 식품을 빈민층에 전달해 빈곤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자원 낭비를 막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이는 민간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케냐 경제가 침체되고 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위기 지속
  - 2021년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5개 도시를 봉쇄
  - 5월 1일부로 봉쇄령은 해제되었으나 야간 통행금지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기준이 완화되어 지속 시행되다가 10월 20일 해제
  - 이러한 봉쇄 조치와 통행 제한으로 경제위기가 지속
- 2020년 케냐는 74만 명이 실직하고, 28년 만에 경제 역성장을 기록
  -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0.3% 감소. 특히 관광 부문 수입이 44% 감소[1)]
- 통행금지로 관광업이 위축되고 관광객 유입이 줄어듦
  - 이에 따라 폐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빈민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짐[2)]

○ 나이로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 'Farm to Feed Kenya'는 케냐 인구의 32%가 식료품 부족과 영양 결핍을 겪고 있고, 케냐의 저소득층 가정은 가계 수입의 75% 내외를 식비에 지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안정적인 식품 공급 모델을 개발해 시행[3)]

1) 연합뉴스, 케냐서 지난해 74만 명 실직…"28년 만에 경제 역성장", 2021.09.11
2) YTN, "쓰레기까지 줄었어요"…케냐 폐품팔이 빈민 '생존 위기', 2020.10.17
3) https://www.farmtofeedkenya.com/the-devastating-paradox

주요 내용

○ **코로나19 긴급구호를 계기로 저소득층의 영양실조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춤**

- 케냐 식료품의 50%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더욱 악화[4]. 이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네덜란드 국제개발 원조기구(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와 협력해 2020년 4월 'Farm to Feed Kenya'를 설립
  - 'Farm to Feed Kenya'는 주 6일 동안 매일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취약계층을 돕는 자선단체에 무료로 배분하고, 일부는 비영리단체에 판매
- 이를 통해 식량자원(식료품 등)의 낭비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저소득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구조 마련
  -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학교 및 시설 등에 공급된 농산물은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

○ **농민의 참여로 유통구조를 간소화하고, 농민에게 저렴하게 구매한 잉여 농산물을 판매 및 기부**

- 'Farm to Feed Kenya'는 나이로비를 기반으로 활동
  - 농민에게 팔리지 않은 농산물 등을 구매한 후 정가의 50% 내외 가격으로 판매하고, 익일(翌日) 배송 시스템 및 온라인 배송 시스템 구축
- 농민에게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 나이로비 인근에 설치된 물류창고(SH: Supply Hub)로 농민이 직접 농산물을 운송해와 유통비용을 절감
  - 주 1회 가격 변동을 공지하고 물류창고별로 코디네이터(SHC: Supply Hub Coor-dinator)를 배치해 농산물의 품질, 물류창고 등을 관리
  - 최소 3일 정도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을 구매
- 농민에게 구매한 잉여 농산물을 빈곤층에 전달하거나 비영리단체 등에 판매

○ **정확한 사용처와 활동 내역 및 성과 등 공개, 성과 관리 시행**

- 'Farm to Feed Kenya'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원금 규모, 활동 현황 및 성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개인 또는 기관이 40달러 기부 시 일주일 동안 12가구에 채소를 제공, 300달러 기부 시 13,000명에게 채소를 제공, 200달러 기부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2톤 저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

4) Association for Development Issues(FUF), The paradox of food waste and hunger, 2021.04.29

○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유통망 구축

-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옥수수 종자, 건초 등을 만들어 판매
  - 농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자체 생산 및 판매를 시작, 향후 지속가능성 담보 및 확대 추진

프로그램 평가 및 시사점

○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영양상태 개선이라는 주요 가치와 결합

○ 잉여 농산물 등의 적절한 활용 및 유통구조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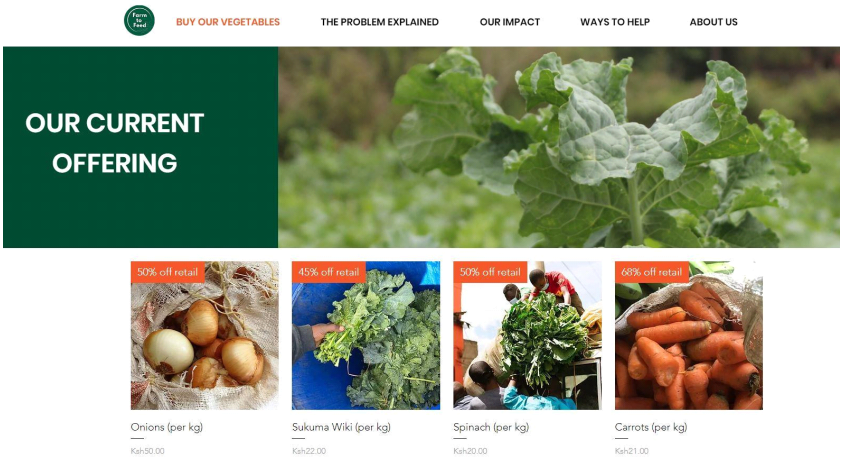
- 대파 한 단이 만 원까지 치솟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도시 외곽에 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잉여 농산물 확보와 유통 혁신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는 이번 사례는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에서도 딸기 산지 논산의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가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판매되어 화제가 되기도 함

○ 사업성 담보를 전제한 민간 참여 사회복지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례임
-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민간 위탁·보조금 지원 방식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민간 참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순 지원 지양, 주민 참여 유도/독려,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

- 지역주민이 물류센터의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농민과 협력해 관련 업무를 수행
  - 단순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수요와 가치, 필요성, 효용성 등이 있는 분야에 지역주민을 투입해 자립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



[그림] 'Farm to Feed Kenya'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잉여 농산물

(출처: Farm to Feed Kenya 홈페이지)

[사진] 지역 농부이면서 Murang'a 물류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직원

(출처: Farm to Feed Kenya 홈페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0157300009

https://www.ytn.co.kr/_ln/0104_202101700034821 79

https://www.farmtofeedkenya.com/

https://fuf.se/magasin/the-paradox-of-food-waste-and-hunger/

한 울 통신원, woolhan0309@gmail.com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법 '장강보호법' 시행

중국 충칭市 외 / 환경·안전

장강은 6,300㎞에 이르는 중국 내 1위 하천이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극심한 수질오염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음.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로, 하천을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인식. 법률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수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

'장강보호법' 제정 배경

○ 장강은 양쯔강(揚子江)의 중국식 명칭으로, 길이가 6,300㎞에 이르는 세계 3위이자 중국 내 1위 하천

- 발원지인 칭하이(青海)성에서부터 11개 省·市를 가로질러 상하이(上海)시까지 이르고, 강 주변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 살고 있음
  - 2018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장강 유역의 거주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추산. 상류, 중류, 하류 유역의 거주 인구는 각각 1억 9,900만 명, 1억 7,500만 명, 2억 2,500만 명에 달함

[그림] 장강 경제벨트는 다시 상류, 중류, 하류의 도시군 경제권으로 구분 (출처: 중국경제일보)

  - 2019년 장강 경제벨트의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보다 6.9% 성장한 45조 7,000만 위안으로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1] 중 1위를 차지

1)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는 북부의 황허(黃河) 경제벨트, 중부의 장강 경제벨트, 남부의 주강(珠江) 경제벨트를 가리킴. 3대 강은 모두 중국 서부지역에서 발원하고 대륙을 횡단해 동부지역에서 바다로 빠져나감

- 장강 유역은 중국 최대의 자동차, 철강, 화학공업, 정유 등의 산업기지가 몰려 있음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강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몸살**

• 매년 장강으로 배출되는 오염수는 약 400억 톤에 달하고, 수토(水土) 유실 면적은 전국의 36%를 차지. 장강 일대 省·市는 산성비가 내리는 전국 省·市의 80%를 차지

- 세계 유일의 민물 돌고래인 양쯔강 상괭이와 최대 5m까지 자라는 민물 철갑상어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

○ **해마다 여름이면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해 전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로 등장**

• 장강 유역에서 1931년, 1954년, 1998년, 2020년에 각각 대홍수가 일어나서 천문학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 기후변화로 발생한 2020년 대홍수에서는 장강 본류와 지류 등에 인접한 27개 省·市에서 3,38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7만 가구가 각종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약 695억 위안에 달했음

'장강보호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장강보호법'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2018년 12월 전인대 환경자원위원회에서 총 10장(章) 76개 조항의 '장강보호법' 초안을 마련

- 2019년 12월 중국 최초의 하천법인 '장강보호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에 들어가 총 9장 96개 조항으로 조정됨

○ **'장강보호법'은 전체 장이 총칙, 규획과 관리·통제, 자원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녹색 성장,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부칙 순으로 구성**

•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이 담겼고, 규획과 관리·통제 및 보장과 감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 분산과 감독 책임을 체계적으로 명시

• 자원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에서는 장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방안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법률 책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생태환경 회복 및 녹색 성장에서는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염된 장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방안을 명시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

○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 시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크게 제고**

- ‘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이었기에 중국 정부는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침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중국에서 홍수, 기습 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면서 중국인들이 환경문제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장강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뜨거웠음

○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라 장강 유역 지방정부의 장강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구체화됨**

- 장강 중류에 위치한 충칭(重慶)시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37개의 장강 오염원을 정리
  - 과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장강 지류의 양식장 8,573개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장강 주변 농촌에서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조치
  - 市 관할 177개 항구와 부두에서 선박 오염수와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향후 10년 동안 장강에서의 어로(漁撈)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어선 5,342척의 폐선을 관리 감독하고 어민 1만 489명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

○ **‘장강보호법’은 중국인에게 ‘어머니의 강(母親河)’으로 불렸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천의 기본 생태계를 회복/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큼**

- 과거 중국 정부는 1988년에 제정하고 네 번을 개정한 ‘하천관리조례’로 하천을 관리해 왔으나, 각기 다른 하천의 상태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하천인 황허(黃河)와 관련된 법률인 ‘황허보호법’ 입법 계획을 수립해 향후 2~3년 내에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https://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长江保护法

https://new.qq.com/omn/20210928/20210928A0DTE700.html

https://m.thepaper.cn/baijiahao_12996841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832083705198183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인도 델리 NCT[1] / 도시교통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음. 특히 지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쇼핑몰/사무실/학교 등 전기차를 보유한 개별 사업자 대상으로 충전 설비 보조금과 설치절차를 지원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책적 배경

○ 인도 중앙정부는 전기 승용차 점유율 목표를 2030년 3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방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1%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용차는 70%, 이륜·삼륜차는 80% 수준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

○ 자동차 보급률이 100명당 5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신차 구매 고객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비한 인프라 문제가 존재

- 인도 전기차 충전소가 2천여 곳에 불과한 만큼, 충전소 확충이 주요 과제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차, 상용차, 버스 등을 전기 이동수단 지원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

- 보조금 규모의 한계로 인해 구매비 보조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자,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 방향을 충전소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전환

○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 내에 전기충전소 50곳, 충전시설 500기를 각각 설치해 2022년 중으로 200여 개의 충전소와 500여 기의 충전시설을 운영할 계획

- 2021년 기준으로 7개 전기충전소 및 42기 충전시설 설치를 각각 완료
- 'One Delh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및 이용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

○ 특히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상용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3만 개 사업소를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목표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설치 전반을 지원하고 있음

- 상용차를 보유한 쇼핑몰, 사무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개별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설치 지원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로 원하는 날짜에 설치 지원
- 주차 공간 및 충전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한 사업자가 정부 보조금 6천 루피를 제외한 개별 납부금 2,500루피를 내면 설치 가능

정책 평가

○ 델리 NCT 정부는 인프라 측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추진

○ 특히 사업자 대상으로 충전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설치절차 지원을 통해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고자 함

[사진]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습

https://auto.hindustantimes.com/auto/news/heres-how-much-installation-of-private-ev-charging-stations-will-cost-in-delhi-41636429694587.html

https://www.carandbike.com/news/new-ev-charging-stations-coming-up-in-delhi-within-six-months-2592487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t-launches-single-window-clearance-subsidy-for-two-wheeler-ev-charging-points-101636396741997.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t-stops-subsidy-for-electric-cars-to-focus-on-twowheelers-101635879052103.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t-withdraws-subsidies-on-electric-cars-here-s-why-11635915060979.html

https://www.thelogicalindian.com/uplifting/battle-against-pollution-delhi-govt-plans-to-install-500-ev-charging-points-by-june-2022-31712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노점상 허가제를 통한 거리환경 정비 추진

인도 델리 NCT[1] / 도시계획·주택

델리 NCT 정부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앞서 지역 내 노점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 노점상에 특정 구역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 그런데 노점상 및 기존 자영업자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이해관계자 등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요구되고 있음

정책적 배경

○ 지역 내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의 난립으로 인해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거리환경 악화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히 지역상인회(National Delhi Traders Association)에서 노점상의 난립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

○ '길거리 노점상 지침(Street Vendor Act)'을 통해 2014년부터 노점상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노점상 수를 현재 인구수의 2.5%로 제한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노점상은 공식적으로 1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델리 NCT 정부는 6,500여 명의 길거리 노점상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매달 5천 루피 상당의 이용료를 부과
- 하지만 지역 내 3천여 곳의 노점시장 내 노점상은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음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4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지역 불법 노점상의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약 7만 1천 명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노점상을 공식 등록

- 노점상 현황 파악은 2021년 말까지 계속되며, 자진신고 기간도 제공
- 공식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등에 위치해 있는 노점상까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음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 노점상 대상 증명서를 발급해 중복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추후 QR코드 방식을 통한 위치 확인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델리 NCT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후 '길거리 노점상 정책(Street Vending Policy)'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

- 노점상 허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록된 노점상에게 특정 공간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통계 데이터 구축 후 지역별 위원회를 두고 노점상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 노점상 구역 등을 할당할 계획

정책 평가

○ 노점상 허가제에 앞서 공식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 방해, 사유지 불법 점유,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이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필요

[사진] 길거리 노점상 모습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t-drafting-street-vending-policy-will-benefit-hawkersbhardwaj-101637425107031.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s-street-vendor-survey-extended-by-2-more-months-71k-identified-in-1st-phase-101634753002484.html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for-delhis-street-vendors-its-not-business-as-usual-after-hc-order/article37170126.ec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street-vendors-temporary-stalls-permanent-row/articleshow/87634486.cms

https://zeenews.india.com/india/delhi-government-to-register-street-vendors-by-december-7-allocate-special-zones-2412687.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17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